

가족부문 지출과 정책과제

Implication on Public Family Expenditure and Family Policy Outcomes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가족부문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보육부문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서비스 욕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한 가족구성 요인으로 인해 가족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족 통계의 생산이나 지표 구성을 가족정책과 연관시켜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이는 지금까지 가족정책이 취약한 가족을 대상으로 잔여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OECD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SOCX)의 가족부문 지출과 OECD Family database의 가족정책 성과를 연계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확대, 아빠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균형적인 가족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1. 서론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사회보험의 성숙과 건강안 고령화에 대한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노령부문과 보건부문의 합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덴마크 52.8%에서 일본 80.7%까지 다양하다(2007년 기준)¹⁾. 이를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노령부문과 보건부문이 급격히 증가하여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노령부문과 보건부문의 합은 67.5%로 나타났다. 그러나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노령부문과 보건부문 지출이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본단위이자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가족'에 대한 정책 욕구가 높고, 영국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OECD 사회지출

1) 원종욱, 임완섭, 김태은(2012).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구조와 재정건전성 기여도 요인분석, 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치학술대회 자료집, p.386.

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20년동안 가족 부문 지출의 증가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보육부문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적 요인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가족구성 요인으로 인한 복지욕구의 증가는 가족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미취학자녀에 대한 보육과 보편적인 자녀양육수당에 관한 공약들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일-가족양립과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면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족 통계의 생산이나 지표 구성을 가족정책과 연관시켜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다²⁾. 이러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야기된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가족정책이 부재한 반면 복지욕구를 가진 취약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인 가족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과 가족수당 등 유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없는 반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다양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

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조손가족에 대한 정책을,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지원과 보육서비스를,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을, 고용노동부는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을,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지원사업 등을 관장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부처에서 가족 관련 사업을 운영할 때,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다양한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집대성하거나 대상별 정책 수혜 여부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해외 연구들은 가족정책을 집대성하거나 가족정책의 성과를 비교하는 시도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³⁾. 특히 OECD는 최근 가족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국들의 가족정책 성과를 비교하고자 Family Database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OECD SOCX에 제시된 가족부문 지출과 OECD Family Database에 나타난 정책성과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OECD SOCX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가족부문지출의 특성을 살펴보고, OECD Family Database의 가족정책 성과와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족정책의 개념 및 유형을 검토하고, 가족정책의 지출과 성과를 연계하여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진미정(2012). OECD Family Database 지표 분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범위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공동총계학술대회 (2012. 6.) 자료집, p.192.

3) 대표적인 연구로 OECD Family Database와 콜롬비아 대학교의 Clearinghous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Child, Youth and Family Policies 등이 있음.

2. 가족 정책의 개념 및 유형

1)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위

가족정책의 개념과 관련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는 Kamerman & Kahn(1978)의 연구이다. 이들은 가족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책의 제공과 시행 방식에 따라 명시적 정책과 묵시적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명시적 정책은 “보육서비스, 공공부조, 각종 조세혜택처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을 뜻하며, 묵시적 정책은 “도로와 건물의 배치, 이민정책 등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 정책의 성과나 실행에 있어서 가족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거나 영향을 미친 정책”을 뜻한다. 이와 유사하게 Gauthier(1999)는 가족정책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였는데, 협의의 가족정책에는 직·간접적인 현금이전, 모성휴가 및 부성휴가, 보육시설 및 서비스가 포함되고, 광의의 가족정책에는 노동시장정책과 노인정책, 결혼·이혼·동거·아동복지 등과 같은 가족 관련 법, 교육·보건 등의 사회서비스, 이민·실업 등과 같은 기타 공공정책을 포함하고 있다.⁴⁾

한편 Ooms(1990)과 Bogenschneider(2004)는 가족의 형성과 해소에 관한 정책, 경제적 부양에 관한 정책, 자녀양육에 관련된 정책, 노약자

의 부양에 관련된 정책을 가족정책의 범위에 포함하였다⁵⁾.

가족정책의 투입과 성과를 측정하거나 가족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Kamerman(1997)은 가족정책을 고용관련 정책, 소득관련정책, 사회서비스로 분류하고 주요 변수로 피고용자 급여, 세금제도와 가족급여,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모성 및 아동 건강 등을 포함하였다. Meyer et al.(1999; 2000) 역시 명시적인 가족정책의 범위에 근거하여 EU 국가들과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을 비교하였는데, 주요 변수로 공보육체계와 모성휴가제도, 양육수당과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이용하였다.⁶⁾ 이와 유사하게 강지원(2009) 역시 가족정책은 소득보장정책과 일가족양립지원정책, 보육서비스, 유아교육서비스로 구분하였다.

OECD SOCX에서 가족부문 지출은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즉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산전후휴가(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돌봄서비스(day care and home-help services), 기타 현물급여(other benefits in kind)가 있다⁷⁾. 그러나 현재 OECD SOCX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별 지출액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OECD Family Database는 핵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The structure of families),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을 보상하는 소득

4) 강지원(2009).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보건사회연구, 2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진미정(2012). p.193 재인용

6) 4와 동일

7)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보장정책(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과 돌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하지 않도록 개입하여 부모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지원(The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균형적인 성장과 발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Cihld outcomes)하도록 구성되어 있다⁸⁾.

이상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정책은 협의의 혹은 명시적인 가족정책과 광의 혹은 묵시적인 가족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가족’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반면 묵시적인 가족정책은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정책 단위로서 ‘가족’이 고려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의 지출과 성과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 명시적인 가족정책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 때 명시적인 가족정책에는 소득지원과 일가족양립,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가 포함된다.

2) 가족정책의 유형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가족정책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Gauthier(2002)는 에스핑안텔센(1990), 페레라(1996), 플라쿠어(2000), 고티에(1996), 로드(1997)의 레짐을 바탕으로 투입(예, 가족에 대한 지출)과 산출(예, 아동빈곤율)을 포함한 가족정책 유형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고티에는 에스핑 안텔센의 유형과 유사하게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사민주의 유형

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보수주의 유형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남유럽 유형으로,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미국은 자유주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 1972년, 1985년, 1999년 가족정책 레짐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와 유사하게 정연택(2007)은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가족정책의 지출수준과 개입 유형에 따른 국가별 유형화를 시도하였는데, 북유럽 국가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였으며, 그리스·이탈리아·한국·일본이 동아시아 군집으로, 미국·포르투갈·스페인이 남유럽 군집으로, 벨기에·뉴질랜드·오스트리아·영국·호주가 영연방군집을 형성함을 밝혔다.¹⁰⁾

윤홍식(2006)은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에 의한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부모권이란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정책을 뜻하며, 노동권이란 부모가 근로자로서 일하는데 지원되는 일가족양립정책을 뜻한다. 분석 결과 부모권을 기준으로 분석한 국가 유형과 노동권을 기준으로 분석한 국가 유형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권과 노동권을 통합한 다차원 척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북유럽국가들이 부모권과 노동권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장지연 외(2005)는 국가가 일과 가족생활의

8)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social/socialpoliciesanddata/oecdfamilydatabase.htm>)

9) Gauthier(2002),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s there convergence?, *Population*, 57(3), pp.447~474.

10) 정연택(2007), 가족정책의 국제비교, *사회복지연구*, 34(3), pp.79~106.

균형을 위하여 양육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주요 변수는 육아휴직일수와 육아휴직의 임금대체율, 여성의 고용형태, 보육 체계(공식부문, 비공식부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스웨덴과 프랑스는 육아휴직 기간은 짧고, 소득대체율은 높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독일과 네덜란드는 육아휴직기간이 길고 임금대체율이 높은 반면 공식적인 보육에 대한 지출 수준이 낮고 여성의 파트타임 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영국은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낮고 비공식적인 보육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¹¹⁾

가족정책 유형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복지레짐 유형에 근거하여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은 가족정책 역시 복지레짐의 일부로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가족정책의 주요 목표를 분해하여 실증 분석한 연구들은 부모를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는 부모로 보는가,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할 근로자로 보는가에 따라 가족정책의 설계와 투자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아동을 사회적 투자 혹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는 정책적 접근들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가족 구성원의 일원인 자녀’ 보다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녀’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부문에 대한 지출과 가족정책의 성과를 살펴봄에 있어 이러한 유형화의 변화

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가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가족정책에 대한 관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될 것이다.

3. 가족부문 지출과 가족정책 성과

OECD SOCX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가족부문 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30여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부문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1990년부터 데이터를 생산한 이래 우리나라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레짐별 가족부문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Esping-Andersen(1990; 2000) 등을 참조하여 레짐을 구분한 Gauthier(2002)를 기준으로 복지레짐을 구분하고, 우리나라와 OECD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복지레짐별 가족부문 지출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보편주의 국가들의 가족부문 지출이 가장 높고, 보수주의 국가, 남유럽국가군, 자유주의 국가 순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보편주의 국가들에서 1995년 가족부문 지출이 가장

11) 윤홍식(2006). 부모부성휴가를 통해 본 남성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 1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 pp.223~249.

12) 장지연, 이정우, 최은영, 김지경(2005).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수주의 국가, 남유럽국가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2009년의 가족부문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남유럽국가군에 속하는 모든 국가들은 OECD 평균보다 가족부문 지출이 낮으며, 자유주의 국가 중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은 최근 OECD 평균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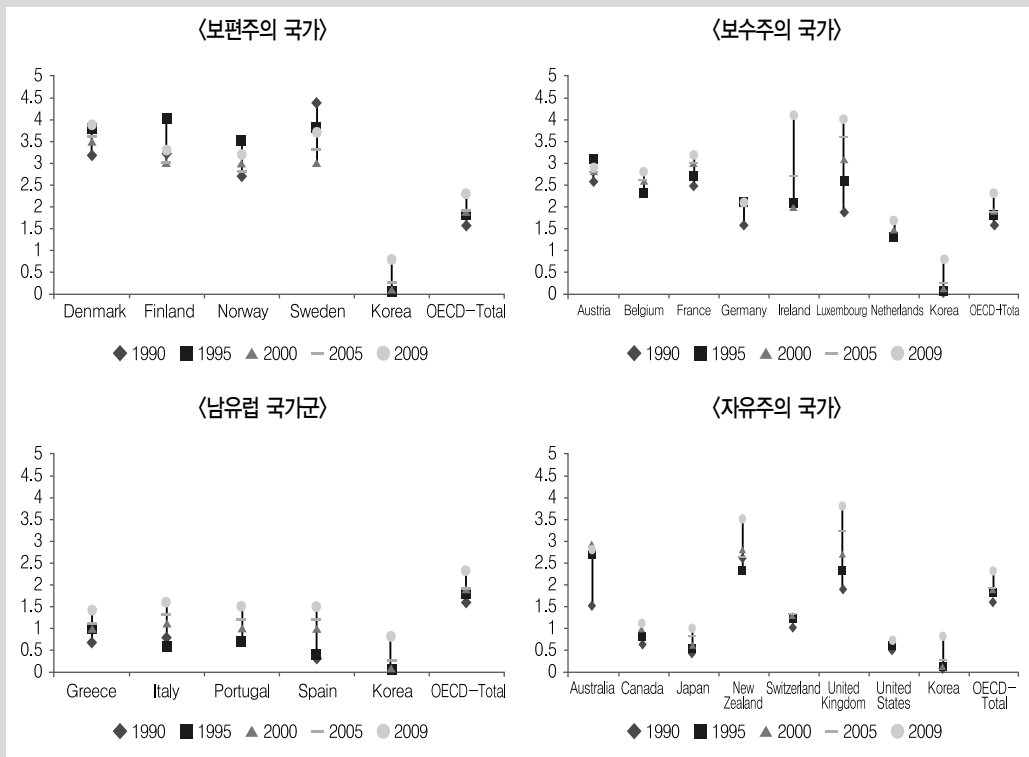
우 잔여적인 가족정책을 보이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가족부문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룩셈부르크(3.1%p)와 영국(2.9%p)에서 이러한 증가폭은 다른 모든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복지레짐별 가족부문 지출의 급여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공공사회복지지

그림 1. 레짐별 가족부문 지출 추이

(단위: % of GDP)



주: 1) 레짐은 Gauthier(2002)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레짐이 불분명한 국가들은 제외함.
 2) 스위스는 2009년 데이터가 없음.
 3) 국가별 자세한 데이터는 <부표 1> 참조.
 자료: OECD SOCX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구성

출의 가족부문 지출을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하고, 급여간 차이를 통해 살펴보았다(부표 2 참조).

그 결과 일관되게 가족부문의 현금지출이 높은 국가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레짐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가족급여,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수당 등 현금급여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레짐에 관계없이 현물급여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와 미국이 있다. 이 두 국가는 아동보육서비스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와는 다르게 급여의 성격이 최근 변화된 국가들이 있는데,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현금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현물 비중이 높아진 국가들이고,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최근 현물 중심에서 현금 급여의 비중이 높아진 국가들이다.

OECD SOCX에서는 정책영역별 프로그램별 지출액이 제시되지 않지만 가족부문 하위 프로그램에는 현금수당과 산전후휴가, 돌봄서비스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기반을 두고 가족부문의 지출을 증가시킨 요인을 찾기 위해서 OECD Family database의 국가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금수당이 가족부문 지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2005년과 2007년, 2010년에 각국의 가족수당 및 가족급여 현황을 살펴 보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5년동안 가족수당 및 가족급여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편주의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지난 5년 동안 평균근로 임금 대비 급여액의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수주의 국가 중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다소 감소한 반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자유주의 국가들(캐나다, 일본, 스위스, 영국)에서 지난 5년간 가족수당 및 급여의 평균

표 1. 레짐별 현금-현물 추이

구분	보편주의	보수주의	남유럽국가군	자유주의
현금중심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현물중심	덴마크			미국, *한국
현금 → 현물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현물 → 현금				일본

주: 1) '현금중심'과 '현물중심'은 연도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현금-현물' > 0 이거나 '현금-현물' < 0 인 국가들임. '현금 → 현물', '현물 → 현금'인 국가들은 최근 급여성격이 변한 국가들임.

2) 우리나라는 복지레짐과 관계없이 제시함.

3) 국가별 자세한 데이터는 <부표 2> 참조

자료: OECD SOCX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구성

임금 대비 비율이 증가한 사실이다. 그러나 호주와 미국에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대상 아동의 연령 상한 기준이 감소함으로써 대상이 축소되었고 일본에서는 아동의 연령 상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이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가족수당 및 급여에 대한 자산조사 기준에서는 거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보편주의 국가와 보수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가족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서는 보편적인 가족수당 외 추가적인 급여의 제공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반면에 남유럽국가군과 자유주의 국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산조사에 기반을 두고 가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리스와 일본, 영국, 스위스에서는 자산조사없이 보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레짐별 가족부문 지출의 추이와 급여성격에 따른 국가별 구분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다. 즉 보편주의 국가에서 자산조사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고 해도 지출의 증가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자녀가 학생인 경우 연령 상한이 20세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지출의 증가가 야기된다. 이는 현물급여 중심인 덴마크를 제외한 보편주의 국가와 현금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수주의 국가와 남유럽국가군,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 현상인 것이다.

한편 그림 1에서 보수주의 국가인 아일랜드와 자유주의 국가 중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최근 가족부문 지출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가족수당 등 현금급여의 증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일수와 급여액을 살펴보면, 산전후휴가일(1)은 영국(52주), 아일랜드(48주), 이탈리아(20주) 순으로 나타나지만 이 중 유급 산전후휴가일(2)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20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또한 산전후휴가일과 유급산전후휴가일 수가 동일한 국가들로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한국으로 나타나고 그 외의 국가들은 유급산전후휴가일이 더 적게 나타난다.

보편주의 국가와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에서는 유급육아휴직일(3)이 산전후휴가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공보육 체계가 잘 갖추어진 보편주의 국가와 프랑스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가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성역할 구분이 명확하거나 여성 파트타임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주의 국가와 남유럽국가,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유급육아휴직일은 산전후휴가기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국가에서 어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책임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종합하면,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에서 유급 산전후 및 육아휴직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국가들은 보편주의 국가들과 보수주의 국가들이다. 반면에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은 법적으로 지정된 유급 산전후휴가일, 유급 육아휴직일이 없다.

표 2. 가족수당 대상선정과 급여액 추이

(단위: %, 세)

레짐	국가	평균임금 대비 비율			아동연령 상한	대상선정기준 (자산조사)
		2005	2007	2010		
보편주의	Denmark	4	4	4	17	없음
	Finland	4	3	3	16	없음
	Norway	3	3	2	17	없음
	Sweden	4	4	3	15(19)	없음
보수주의	Austria	4	4	6	19(27)	없음
		2	2			자산조사
	Belgium	3	3	3	17(24)	없음
	France	2	2	2	20 → 19	없음
		7	6	*	3	
	Germany	5	5	5	18(27) → 18(25)	없음
		*	*	5		있음
	Ireland	4	5	7	15(18)	없음
Luxembourg	7	6	6	17(26)	없음	
Netherlands	2	3	2	17	없음	
	*	*	3	17	가족소득	
남유럽 국가군	Greece	1	0	0	17(21)	없음
	Italy	4	4	4	17	가구과세소득
		*	*	3	17	가구과세소득
	Portugal	3	2	3	15(23)	가족총소득
Spain	1	1	1	17	가족총소득	
자유주의	Australia	8	8	7	20(24)	가족소득
		6	6	6	15(18)	1인소득자가구
	Canada (온타리오)	3	3	3	17	가족과세소득
		4	5	5		(가족순소득 →
		*	*	2		가족과세소득)
	Japan	1	1	3	9 → 12 → 15	없음
	New Zealand	9	10	9	18	가족소득
	Switzerland	3	3	4	15(24)	없음
UK	3	3	3	15(18)	없음	
	*	*	8	15(18)	가족총소득	
US	3	3	2	*	있음	

주: 1) *각년도에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2) () 은 학생일 경우 연령상한 기준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의 자료 재구성

한편 아동 1인당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급여액을 기준을 살펴보면, 레짐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핀란드와 스웨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포함한 보편주의 국가들이 50% 이상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보수주의 국가들은 네덜란드 12.9%에서 룩셈부르크 40.7%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평균 22.1% 수준으로 나타난다. 남유럽국가군 역시 그리스 10.8%에서 포르투

표 3.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2011/2012)

(단위: 평균 임금소득 대비 %)

레짐	국가	산전후 휴가	유급 산전후 휴가	유급 육아휴직	무급 육아휴직	유급 산전후 및 육아휴직	아동 1인당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급여액 (2009)
		(1)	(2)	(3)	(4)	(2)+(3)	
보편주의	Denmark	18.0	9.6	17.1	22.8	26.7	53.4
	Finland	17.5	11.7	32.8	119.7	44.5	66.6
	Norway	9.0	9.0	28.8	59.4	37.8	50.8
	Sweden	10.0	8.0	38.6	20.6	46.6	62.9
보수주의	Austria	16.0	16.0	41.6	84.7	57.6	16.5
	Belgium	15.0	11.5	11.0	10.2	22.5	16.3
	France	16.0	16.0	29.5	118.2	45.5	24.9
	Germany	14.0	14.0	34.8	107.4	48.8	31.0
	Ireland	48.0	10.8	0.0	14.0	10.8	12.4
	Luxembourg	16.0	16.0	10.3	13.9	26.3	40.7
	Netherlands	16.0	16.0	4.9	20.7	20.9	12.9
남유럽 국가군	Greece	17.0	17.0	0.0	30.3	17.0	10.8
	Italy	20.0	16.0	7.2	18.2	23.2	18.7
	Portugal	12.5	12.5	9.0	13.0	21.5	34.0
	Spain	16.0	16.0	0.0	144.0	16.0	28.7
자유주의	Australia	6.1	2.6	0.0	52.0	2.6	8.1
	Canada	15.0	8.3	19.3	15.8	27.5	17.6
	Japan	14.0	9.2	26.0	12.8	35.2	19.1
	New Zealand	14.0	7.0	0.0	38.0	7.0	5.6
	Switzerland	14.0	11.2	-	0.0	11.2	-
	UK	52.0	12.7	0.0	13.0	12.7	28.3
	US	12.0	0.0	-	-	0.0	-
	Korea	12.8	12.8	9.7	35.9	22.5	3.3

주: 1) (1)에서 (4)는 2011/2012년 자료임.

2) 아동 1인당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급여액은 2009년 자료이나, 독일과 그리스, 스페인은 2008년, 이탈리아, 영국은 2007년, 네덜란드는 2005년 자료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재구성

갈 34.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평균 23.1%로 보수주의 국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국가들은 뉴질랜드 5.6%에서 영국 28.3%까지 격차가 다소 적으며 평균 15.7%를 보여 다른 레짐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유급산전후휴가일수는 길지만 유급육아휴직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무급육아휴직일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급 산전후 및 육아휴직기간은 자유주의 국가들보다는 높고 남유럽국가군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아동 1인당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급여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 1인당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급여액을 기준으로 볼 때 레짐별 특성은 가족부담 복지지출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가족수당으로 설명하지 못한 국가별 특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룩셈부르크와 영국이 가족수당에 비해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룩셈부르크는 다른 보수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일가족양육에 대한 지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수준은 보편주의 국가들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3-5세 아동이 공식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에 등록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에서 이러한 비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0-2세 영아가 공식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등록할 가능성은 50% 미만으로 나타나는데(덴마크 65.7%, 네덜란드 55.9%, 노르웨이 51.3% 제외),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 영아에 대한 부모의 보육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어린 영아는 부모의 품에서 자랄 것을 선호하는 아동발달심리학의 영향(예, Piaget의 인지발달이론, Erikson의 생애주기이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아기에는 다양한 인지적, 신체적 자극을 주고 이를 통한 인지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와 그리스에서는 유아기의 등록율이 50%를 넘지 않고 있으며, 아일랜드와 호주, 캐나다, 미국 등과 같이 비공식보육이 발달한 국가 역시 공식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등록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들 국가에서 보육료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대부분 평균임금 대비 40% 수준), 보편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대부분 평균 임금 대비 10% 내외). 그러나 양육비 지원과 세제급여, 기타 급여 등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벨기에와 포르투갈, 호주, 룩셈부르크에서 이러한 지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의 순비용은 평균임금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레짐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보편주의 국가와 남유럽국가군은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반면 보수주의 국가들은 20% 미만(아일랜드 제외)으로 나타나는 반면 자유주의 국가들은 40% 내외로 나타난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일랜드가 44.6%로 가장 높고, 영국 43.1%, 스위

스 39.0%, 뉴질랜드 36.4% 순으로 나타난다.

보육료에 대한 순비용을 가족소득 대비 비율로 나타내면, 가족에게 있어 미취학 자녀에 대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역시 레짐별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보편주의와 남유럽국가군은 10% 미만의 부담으로 나타난 반면, 보수주의 국가들은 15% 미만, 자유주의 국가들은 30% 내외로 나타났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 32.7%로 가장 높고, 스위스 29.8%, 아일랜드 29.2%, 뉴질랜드 27.5%, 캐나다 22.0% 순으로 나타난다. 즉 평균 임금 대비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보다 가족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국가간 차이가 완화되었다. 또한 공식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미국은 보육료 자체는 많았지만 아동에 대한 조세지원(Child Tax Credit, CTC)와 보육돌봄에 대한 조세지원(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을 통해 순비용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가족소득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등록율과 3~5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등록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영어유치원 등 학원 이용에 따른 대상이 제외됨으로써 유아기 등록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보육료가 보편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양육비지원과 세제급여, 기타 급여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평균임금대비 순비용은 1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가족소득 대비 순비용은 8.7%로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용 수준 역시 남유럽국가군과 보편주의 국가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가의 개입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등록율과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보편주의 국가들과 보수주의 국가 중 아일랜드, 자유주의 국가 중 뉴질랜드와 영국의 높은 지출수준을 설명할 수 있다.

4. 가족부문 지출의 함의와 정책과제

새로운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2013년 1월 27일 공포)과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할 사회보장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통해 평생 맞춤형 복지와 국가 책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행복시대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공약의 핵심과제가 노령부문과 보건부문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약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책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새 정부 가족정책의 공약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보전하고, 부모가 자녀 양육과 직장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균형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일가족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이 시설이용 유무와 시설형태에 관계없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에 명시된 사회보장통계의 생산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자료의 한계로 국제기구에 제출하지 않았던 가족 관련 통계(OECD Family databas)의 생산을 용

표 4. 유아교육 및 보육(ECEC) 등록율 및 보육료

(단위: %)

레짐	국가	유아교육·보육 공식 등록율		보육료 및 순비용					
		0~2세	3~5세	보육료	양육비지원	세제급여	기타 급여	순비용	순비용
보편 주의	Denmark	65.7	91.5	11.4	-3.0	0.0	0.0	8.4	7.8
	Finland	28.6	74.2	9.2	0.0	0.0	0.0	9.2	7.2
	Norway	51.3	94.5	18.0	-2.7	-5.7	0.0	9.7	7.7
	Sweden	46.7	91.1	7.6	0.0	0.0	0.0	7.6	6.2
보수 주의	Austria	12.1	77.6	19.1	0.0	0.0	0.0	19.1	14.9
	Belgium	48.4	99.4	31.6	-22.1	-4.8	0.0	4.7	4.2
	France	42.0	99.9	16.8	0.0	-1.9	0.0	14.8	11.3
	Japan	28.3	90.0	24.9	-5.0	0.0	0.0	19.8	14.2
	Netherlands	55.9	67.1	22.7	0.0	-9.2	0.0	13.5	11.5
	Luxembourg	38.6	85.9	19.1	-10.6	0.0	0.0	8.5	5.7
	Germany	17.8	92.7	16.0	-6.9	0.0	0.0	9.1	8.4
	Ireland	30.8	56.4	49.6	-5.0	0.0	0.0	44.6	29.2
남유럽 국가군	Greece	15.7	46.6	8.9	-2.2	-0.1	0.0	6.6	4.7
	Italy	29.2	97.4	-	-	-	-	-	-
	Portugal	47.4	79.2	27.8	-21.4	-0.5	0.0	5.9	4.2
	Spain	37.5	98.5	-	-	-	-	-	-
자유 주의	Australia	29.0	54.6	44.7	-15.1	-16.4	0.0	13.3	9.7
	Canada	24.0	56.8	40.4	0.0	-12.6	1.2	29.1	22.0
	NewZealand	37.9	94.1	40.7	-4.1	-0.3	0.0	36.4	27.5
	Switzerland	-	47.5	40.4	0.0	-1.4	0.0	39.0	29.8
	UK	40.8	92.7	47.8	-4.7	0.0	0.0	43.1	32.7
	US	31.4	55.7	39.1	0.0	-11.8	0.0	27.3	19.4
	Korea	37.7	79.8	14.3	0.0	-1.0	0.0	13.3	8.7

주: 2004년 2인 소득자 가구인 평균임금 167%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재구성

이하계 할 것으로 기대된다.<표 5>에서 제시하
 는 바는 새누리당 가족관련 공약과 현행 제도
 유무, 공약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새누리당
 에서 제시한 가족부문 공약 대부분이 한국의 공
 공사회복지지출 중 가족부문의 지출 증가를 야

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보장통계의 생산에
 따라 지금까지 OECD Family database에서 누
 락되어왔던 통계 역시 대량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제도는 OECD SOCX database가 아니라 OECD

표 5. 18대 새누리당 대선공약 중 가족부문

공약명	공약내용(예시)	SOCX (영역)	Family DB	현행 제도
새아기 장려금 지급	자녀장려세제도입	가족	+	×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5% → 10%)	×	+	× ○
임신과 출산 국가부담 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확대, 저소득가구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확대,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에 따른 경비지원, 고위험 임신부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가족		○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아이돌보미 기본형+종합형+파견형 구분 영아종일제 0세 → 만 2세로 확대(취업모, 다자녀, 장애부모로 한정) 시간제 돌봄은 시설이용, 시설미이용, 미취업모 자녀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나홀로아동 무료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농산어촌 등 아이돌보미 우선 돌봄서비스 제공	가족		○
0~5세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 책임	가족	+	○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시설확대, 최저생계비 150% 대상 확대, 양육비 확대(월 5 → 15만원)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양육비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지원	가족	+	○ +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다문화가족종합정보콜센터 운영	가족		○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범위확대(미취학→초등 3학년)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가족		○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휴직 사용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가족	+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임신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일일 2시간 단축 근무, 단축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삭감 금지	가족	+	×

주: ○ 현행 (유사한)제도가 있음.
 × 현행 제도가 없거나 해당되지 않음.
 +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될 내용임.

자료: 새누리당(2012). 제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을 이용하여 재구성.

Education database에 포함되는 범위이다.

이미 2013년 예산 편성 중 대선공약 일부가 반영되었는데, 0~5세 무상보육 예산(1조2,504억원)과 육아서비스 개선(451억원),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양립(395억원)이 확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 (1)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중 일부인 5,607억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일반회계에서 3,607억원,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에서 2,000억원씩 부담하여 2013년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³⁾.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단위로서 ‘가족’을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등장으로 임신 및 출산, 0~5세 자녀에 대한 유아교육 및 보육,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비 부담, 대학등록금 부담 등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사적 부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보편적인 지원방식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실적인 기준에 맞추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들이 시설이용유무와 시설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현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선 우리나라는 가족정책이 서로 다른

부처에서 서로 다른 추진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간 칸막이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용자인 아동과 부모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따라서 부처간 정책 칸막이를 없애는 데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평생안전망의 경우 보건복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교육분야, 고용분야, 주택분야, 여성분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정책들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가족정책 중에서도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저출산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높은 시점에서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과 육아휴직 확대가 이용자에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절차와 정책적인 수단도 필요하지만 직장 사회의 분위기도 요구된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족정책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책의 추진방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

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표 1.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가족부문 지출 추이

(단위: % of GDP)

레짐	국가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자유주의	Australia	1.5	2.7	2.9	2.7	2.8
보수주의	Austria	2.6	3.1	2.8	2.8	2.9
보수주의	Belgium	2.3	2.3	2.6	2.6	2.8
자유주의	Canada	0.6	0.8	1.0	1.1	1.1
보편주의	Denmark	3.2	3.8	3.5	3.6	3.9
보편주의	Finland	3.2	4.0	3.0	3.0	3.3
보수주의	France	2.5	2.7	3.0	3.0	3.2
보수주의	Germany	1.6	2.1	2.1	2.1	2.1
남유럽국가군	Greece	0.7	1.0	1.0	1.1	1.4
보수주의	Ireland	2.0	2.1	2	2.7	4.1
남유럽국가군	Italy	0.8	0.6	1.1	1.3	1.6
자유주의	Japan	0.4	0.5	0.6	0.8	1.0
보수주의	Luxembourg	1.9	2.6	3.1	3.6	4.0
보수주의	Netherlands	1.7	1.3	1.5	1.7	1.7
자유주의	New Zealand	2.6	2.3	2.8	2.6	3.5
보편주의	Norway	2.7	3.5	3.0	2.8	3.2
남유럽국가군	Portugal	0.7	0.7	1.0	1.2	1.5
남유럽국가군	Spain	0.3	0.4	1.0	1.2	1.5
보편주의	Sweden	4.4	3.8	3.0	3.3	3.7
자유주의	Switzerland	1.0	1.2	1.3	1.3	-
자유주의	UK	1.9	2.3	2.7	3.2	3.8
자유주의	US	0.5	0.6	0.7	0.7	0.7
	Korea	0.03	0.06	0.11	0.26	0.81
	OECD- Total	1.6	1.8	1.9	1.9	2.3

주: 레짐은 'Gauthier(2002)' 참조하여 작성; 레짐이 불분명한 국가들 제외
 스위스는 2009년 데이터가 없음.
 자료: OECD SOCX database 재구성

부표 2.가족부문 지출의 현금-현물 추이

(단위: % of GDP)

레짐	국가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자유주의	Australia	0.9	1.5	1.7	1.5	1.1
보수주의	Austria	1.8	2.2	2.0	2.0	1.7
보수주의	Belgium	2.0	1.9	1.0	0.8	0.8
자유주의	Canada	0.4	0.8	0.6	0.7	0.7
보편주의	Denmark	-0.4	-0.2	-0.5	-0.4	-0.7
보편주의	Finland	0.4	1.3	0.5	0.2	0.1
보수주의	France	0.5	0.3	0	-0.2	-0.4
보수주의	Germany	0.7	0.6	0.7	0.6	0.3
남유럽국가군	Greece	0.1	0.5	0.3	0.3	0.6
보수주의	Ireland	1.9	1.9	1.2	1.6	2.5
남유럽국가군	Italy	0.4	0.2	-0.1	-0.1	0
자유주의	Japan	0	-0.1	-0.2	-0.2	0.1
보수주의	Luxembourg	1.4	1.8	2.2	2.6	3.0
보수주의	Netherlands	0.7	0.6	-0.1	-0.5	-0.1
자유주의	New Zealand	2.6	1.7	1.5	1.2	1.4
보편주의	Norway	1.0	0.9	0.7	0.3	-0.4
남유럽국가군	Portugal	0.5	0.5	0.2	0.3	0.5
남유럽국가군	Spain	0.1	0.2	-0.4	-0.2	-0.2
보편주의	Sweden	-0.2	0.1	0	-0.3	-0.6
자유주의	Switzerland	0.8	0.9	0.7	0.7	-
자유주의	UK	1.1	1.3	0.9	1.2	1.1
자유주의	US	-0.1	0	-0.5	-0.4	-0.5
	Korea	-0.029	-0.058	-0.104	-0.231	-0.728

주: 데이터는 현금-현물로 구성되며, 마이너스부호는 현물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OECD SOCX database 재구성